

의견과 소문을 사실처럼...

나쁜 뉴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3〉 취재원과 출처 안 밝히기

— 피동형 표현



김지영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울 제4부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편집인

저널리즘의 요체는 사실이다. 이때의 사실이란 검증된 사실, 확인된 사실을 말하며 보도 문장에서는 ‘취재원 밝히기’가 사실의 검증과 확인을 담보하는 장치다. 기자가 스스로 체험하고 쓰는 르포가 아니라면 반드시 취재원이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취재원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알 수 없고, 보도문장에 나타나는 사실 자체를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기사 내용의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도 알 권리가 있다. 보도윤리의 으뜸가는 실천요강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실상은, 취재원을 드러내지 않는 기사가 너무나 많다. 하루동안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체 기사 중에는 취재원을 밝히는 문장보다 밝히지 않는 문장이 더 많지 않을까. 취재원을 밝히지 않는 기사라면 일단 불량뉴스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짜뉴스로 가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필자는 가짜뉴스와 불량뉴스를 합해 ‘나쁜 뉴스’로 부르기로 했다).

피동형 표현이 주범

그중 문장에서 취재원(행동주체)을 나타내지 않고 피동형 종결어미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다. ‘파악된다’, ‘전망된다’, ‘판단된다’, ‘풀이된다’, ‘점쳐진다’, ‘추정된다’, ‘예상된다’, ‘주목된다’ 등이 있다.

우리말 문장에서는 피동형을 쓸 경우, 행동주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피동의 형식은 관점 자체가 대상에 있고 행위자는 생략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것이다. 영문법에서도 수동태(우리의 ‘피동형’)를 쓸 때는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불분명할 때 ▲행위의 책임을 언급하고 싶지 않을 때 등이다.¹⁾

〈 사례 〉

- ▲ 그가 알고 있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활동 내용이 어떤 것인지 등을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 한편 전 목사는 지난 주말 집회에서 오는 21일 집회가 마지막 광화문 집회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드루킹 부인 최모씨를 최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 폭발이 직원들 퇴근 시간대인 오후 4시 30분께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직원들을 겨냥한 테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 감사관실의 조직 흔들기도 점쳐지고 있다.
- ▲ 미국 내 투자·고용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켰을 것으로 분석된다.
- ▲ 타워크레인 관련 한국노총 노동조합 1개 지방권역 조직이 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 ▲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세용 SH 사장의 자녀들이 항서제약 주식을 2018~2019년 사이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정부와 여당은 27일 세제개편안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증세대상 논의는 고소득·대기업에 이어 금융자산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 (전략) 재계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박영수 특별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략) 해외시장에서의 삼성 브랜드의 실추는 물론 해외 협력파트너 및 투자자들이 속속 발을 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알리고, 전하고, 파악했다는 말인지, 또 점을 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기자들이 취재원을 밝히지 않고 소문이나 자기 의견을 피동형으로 처리해 표현하는 이유는 몇

1) 김지영 (2011), 〈피동형 기사들〉, 효형출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대개 ▲소문이나 제보에 대해 확인취재 없이 추측성 기사를 쓸 때 ▲클릭 수를 늘이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독자들의 시선을 붙잡으려 할 때 ▲진영논리나 이념, 선입견 등 경향성 강한 의견을 내세울 때 등이다.

전통매체에, 인터넷 신문만 1만 개가 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매체가 하루에도 6~7만 개의 뉴스를 생산·유통하고 있으며(추정치), 그중 상당수는 (설사 가짜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불량뉴스들이다. 또 불량뉴스 중 상당수는 이같은 피동형 문장을 남용하고 있다.

취재원이나 출처가 없는 피동형 표현의 보도문장들은 신문윤리 실천요강의 핵심규정을 위반한다. 저널리즘 수칙의 원전인 신문윤리강령에서는 “기자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도기사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자는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또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취재원 보호 등) 부득이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① 취재원의 명시와 익명조건).

피동형의 단골 1 ... 북한 기사

특히 북한 관련 기사에는 이처럼 취재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북한 내부에 관한 기사는 극히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취재하기가 어렵다. 취재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통령실이나 통일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는 일이 많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주요 취재원이긴 하지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안보실이나 국정원 등 관련 주요부서의 관계자들이 보고를 할 때는 대부분 비공개(기자들에게)로 한다. 회의가 끝나면 기자들은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은 상대로 크로스 체크(교차 취재)를 한 후, 공통적인 내용이 나오면 기사화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왕래하며 접촉하는 중국 내의 인사들을 상대로 취재한다. 어느 경우건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보도는 만주별판이다”

이는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씨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힌 말이다. 이렇듯 북한 취재는 정확한 취재원이 드물기 때문에 보도가 잘못되기 쉽고 또 잘못돼도 북한 핑계만 대면 된다. 뭘 확인하려 해도 만주별판같이 넓기만 한데 보이는 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사례 〉

▲ ‘북한, 풍계리 취재비 요구’ 보도

2018년 5월 21일, MBC 930뉴스는 ‘주중 북한대사관이 외신 기자에게 풍계리 방북 취재비자 발급비용으로 1만 달러씩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얼핏 기사를 보면 MBC가 주중 북한대사관의 관계자를 취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도문장에 취재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결과 MBC는 주중 북한대사관을 취재하지 않았다. MBC는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던 것이다. 채널A와 MBN 역시 TV조선의 보도를 확인없이 그대로 받아 MBC처럼 방송했다. 게다가 조사결과 처음 보도한 TV조선조차 북한 측을 취재하지 않았다고 방심위 측은 밝혔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조선의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법정제재인 ‘주의’ 결정을 내렸다. MBC와 채널A, MBN에게는 행정지도인 ‘권고’ 조치를 했다.

피동형 단골 2 ... 인사 예고 기사

주요 인사 예고 기사라면 주로 청와대 고위직 개편이나 정부 개각의 내용이다. 노벨상 수상자나 신임 교황에 대한 인사 예고 기사도 같은 범주에 든다.

정부 고위직 인사는 국정운영상 중대사인 만큼 뉴스 가치도 매우 크다. 세인의 관심이 높아 이럴 땐 신문의 열독률도 높다. 이 때문에 취재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이런 정부 고위직 인사 내용을 미리 취재하기는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어서 그 심중을 미리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을 탐문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결국 기자들은 해당 분야 고위직 인사 대상이 될 만한 후보군을 자료취재로 파악하고 직접 이들을 대상으로 취재를 한다. 그리고 청와대나 정부·여당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탐문취재를 한다. 인사권자의 심정이 되어 능력과 도덕성, 또는 해당 정부와 이념적·정서적·지역적 동질성이 어떤지 등을 기준으로 삼고 이들을 추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직 인사 예고 기사는 오보가 되기 십상이다. 취재결과 확신이 드는 후보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해당 직위 후보로 한사람만 거론하기에는 오보 가능성의 부담이 크다. 김영삼 문민정부 때는 장관으로 내정된 이의 이름이 인사 예고 기사에 미리 나갔다는 이유로 내정된 이가 탈락한 일이 있을 정도로 인사 보안은 철저하다.

〈 사례 〉

▲ 文대통령, 오늘 오후 '개각'...'중폭 규모' 관측 (종합) 교육·고용·국방·산업 등 거론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위한 개각을 단행한다. (중략) 후임 산업부 장관으로는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성윤모 특허청장의 승진 기용도 접처지고 있다. 고용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이재갑 전 차관,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에 의원이 꼽힌다. 국방부는 유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새 수장으로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불화설에 시달렸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략)

피동형 단골 3 ... 수사속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상황은 공식 발표가 아닌 경우, 그 내용을 취재하기가 어렵다. 중요 사건은 수사 검사나 경찰은 물론 지휘 라인에 있는 상급자, 관련 사무직원을 접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사기관 내부에서 철저하게 입단속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 탐이 없는 물체는 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취재를 한다. 그리하여 이들로부터 한두 마디를 듣게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크로스 취재에 나선다.

고위 수사관계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므로 전화·이메일 등 통신수단 이용은 당연하고 심야에 자택 앞에서도 기다린다. 과거에 같은 유형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경찰 출신 인사들도 취재대상이다. 동종 수사의 일반적인 개연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나 총리실 관계자, 정보계통 종사자, 여당 주요인사, 드물게 야당인사에까지 취재의 축수를 뻗는다. 이들은 수사상황의 '수신 레이더'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의 취재도 마찬가지이지만, 경험이 많고 인맥이 넓어 노련한 기자들이 이때문에 필요하다.

〈 사례 〉

▲ '軍 댓글수사 축소 의혹' 다시 김관진 겨냥?

검, 당시 軍 조사본부장 압색

지휘라인 따라 수사 확대

김 前 장관도 수사 선상에

(전략)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후 다른 조사관을 투입해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새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권 전 중령을 구속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관련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김 전 장관 등이 수사 무마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위에 든 여러 사례문들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이를 위해 보도문장에 취재원을 밝히려는 보도윤리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들이 보도문장 스타일로 보편화



돼가고 있다. 취재원이나 출처가 없는 피동형 문장은 기자들이 써서는 안 될 제1의 금기인데도 오늘날 저널리즘에 무단정착을 해버렸다. 요즘은 기자들이 버젓이 취재원을 확보하고도 문장은 피동형으로 쓰는 이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말하자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 불어닥친 거센 역풍에 휩쓸려 너도나도 하나의 습관으로, 보편적인 문체의 하나처럼 피동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대해 간단한 작업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사, 가령 부고기 사나 동정기사 같은 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동형으로 쓰고 만다. 기자들이 간단한 사실마저 확인하지 않거나, 번연히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동형 표현을 마치 기사작성 요령의 하나처럼 잘못 인식한 결과이다.

〈 사례 〉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70)의 부인 서영민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61세.

9일 재계에 따르면 서 여사는 최근 미국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으며, 암으로 투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서 여사는 당시 서울대 약학대학 3학년생으로, 결혼 뒤에도 학업을 이어가 수석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로는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과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 등 세 아들을 뒀다. 김 회장과 세 아들은 미국으로 건너가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재윤 전 의원이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제주 출신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당선돼 여의도에 처음 입성했다. (중략) 김 전 의원은 이날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 대부분의 매체들이 일상적으로 저널리즘의 기본인 보도윤리를 위반하고 있다. 일반 취재기자들은 물론, 저널리즘을 앞장서 강조하는 유명 방송 앵커나 신문 칼럼니스트들도 일상적으로 저널리즘과 보도윤리를 위반하는 보도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 해서 당연한 것처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디지털 미디어 문명은 축복인 동시에 가짜뉴스 같은 역풍 때문에 재앙이 되고 있다. 특히 보도매체를 접하는 독자와 시청자, 이용자들은 물론 전공학생들과 기자들도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가짜뉴스와 불량뉴스 등 나쁜 뉴스를 식별해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보도윤리를 익혀야 한다. 🌐

